

BUDGET & POLICY

예산춘추

2019 Winter Vol.53



행복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
행복이 소복이 쌓인다.



NABO 칼럼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NABOSTATS

NABO A side
NABO와 사람들
: 예산문서집

Contents

예산춘추
2019 WINTER
Vol.53



PROLOGUE

04 NABO Photologue

기관 동정
주요 업무 활동
국제협력

PART 01.

NABO 칼럼

09 특집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정우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추경호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성태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우철

27 논단

예산안 자동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박현석
2019년 대외경제 여건 분석 및 전망 | 안성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결과 및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쟁점 사항 | 이용하

발행일 2019년 2월 25일(통권 제53호)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인 송수환 기획관리관

예산춘추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수환 기획관리관

위원 임명현 총무담당관, 권순영 정책총괄담당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윤여문 예산분석관,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최선웅 추계세제분석관,
진의 경제분석총괄과장, 임재금 인구전략분석과장

간사 김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전화 02-788-4619 팩스 02-788-4686 홈페이지 www.nabo.go.kr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PART 02.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 41 국가채무시계 소개
- 43 숫자로 보는 정책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 46 2018년 NABO 주요 업무 성과
- 47 최신 분석보고서 소개

PART 03.

NABO 人side

- 55 NABO와 사람들
예산분석실
- 60 NABO 인사 동정

PART 04.

NABO Life

- 62 한 토막 경제 상식
나 몰래 '잠 들어 있는' 내 돈,
격하게 깨워보자!
- 64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트럼프 정부 35일 최장 섰다운…
경제 주름살, 증시에도 영향
- 66 2월 국회 문화 행사

기관 동정

01. 성탄트리 점등식



2018년 12월 6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국회의정관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02. 2019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시무식

NABO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춘순 처장과 NABO 직원들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새로운 포부를 다졌다.



2019년 1월 2일

03. 설 맞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김춘순 처장과 NABO 직원 20여 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나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생산품 제작 작업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04. 임용장 수여식



김춘순 처장은 임명·전입·전보·복직·승진한 직원들을 환영하고 새해 처음으로 임용장을 수여했다.

주요 업무 활동

01. 2018년도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김춘순 처장은 2018년도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해방 위원장 등 9명의 예산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여 2019년도 NABO의 비전과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02. 2019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NABO 등 국회 소속기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2019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춘순 처장은 이 자리에서 NABO의 전년도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제협력

01. 인도네시아 하원 예산위원회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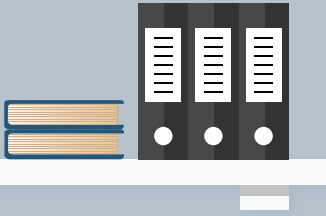


아지스 샴수딘(Aziz Syamsuddin)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하원 예산위원회 대표단을 맞이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NABO의 역할을 소개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02.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참석



송수환 기획관리관, 권순영 정책총괄담당관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 참석했다.



PART
01



nabO 칼럼

09

특집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정우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추경호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성태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 김우철

27

논단

예산안 자동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박현석

2019년 대외경제 여건 분석 및 전망 | 안성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결과 및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쟁점 사항 | 이용하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대적 배경

2019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와 기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의 재정과 예산의 기능은 항시 가동되는 것이나 그 세부적 정책 흐름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마련이다. 과거 정부의 재정과 예산이 권력자와 그 주변인사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된 국정농단을 경험한 국민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각성한 국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재정과 예산 정책은 과거와 같이 호락호락하게 수립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시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이뤄낸 근대 재

정은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임무 이행을 위해서도 국가의 재정 정책은 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새 활력, 새 동력의 창출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양극화 추세에서 주요국은 포용적 성장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최근에 개최된 거의 대부분의 국제 다자간 회의

의 의제는 공통적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재정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표 포용적 성장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재정정책 흐름

최근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통화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대체로 재정건전화의 기초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로 세계 경제에 장기 저성장 기조가 드리우면서 성장세 약화, 투자 부진 등 경제 활력의 저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투자 증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세계개혁과 재정지출 한도를 확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초를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8년 및 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 달러, 1,530억 달러 증액했는데 주요 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이같은 재정지출의 확대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 제고효

과를 0.5%p에서 1.0%p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 또한 최근 4년간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2018~2021년간 재정지출을 총 460억 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인 3,375억 유로 증가한 재정지출 계획이 담겼으며, 예산항목별로 가족과 사회 분야에 120억 유로, 지역과 교통 분야에 120억 유로, 저소득층 통일연대세 인하분에 100억 유로 등이 편성된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이같은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2019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0.3%p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청년·노인·장애인 관련 정책과 저소득층 및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현금 보조 등의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해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노력 역시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는 4년간 재정지출을 매년 2.1%씩 확대해나가며 교육과 연구 분야에 20억 유로 그리고 사회보장에 16억 유로 등 총 145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예정이고, 스페인의 경우에도 정부지출 한도를 상향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경감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8.7% 인상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을 목표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규모 또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세율 또는 비과세·감면 수준을 조절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반의 경제정책이다.

다시 말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이행에는 재정지출의 확대 및 조세 감면을 통한 수단이 활용된다. 재정지출은 단기간에 총수요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조세정책은 가계 및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며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역기능 측면도 존재한다. 재정지출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 수요를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조세감면 역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 이외의 저축으로 이어지거나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실질적 감세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입보다 세출이 커지는 구조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측면도 있다.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수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한 재정정책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

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확장적, 재정수지 흑자를 긴축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지표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는 3년간의 초과세수로 인한 실질적 긴축재정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초과세수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상환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적자부채를 조기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2019년도 470조 원의 예산 편성과 부채 조기상환 규모 역시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화 방향을 적절히 병행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며 178조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밝혔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과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착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과 세 강화, 고질적인 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 등 95.4조 원에 달하는 세출절감 계획을 강조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가 담긴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일컬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시대적 요

구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부응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9,000억 원이 순감액이 되긴 했지만 핵심 국정과제의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며 민생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혁명의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간투자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 등 2019년 상반기의 재정집행 목표를 61% 수준으로 설정해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계획을 실시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치로, 특히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70% 수준을 조기 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의 확대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5.8%보다 1.5%p 상향된 수치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 외에도 조세와 이전지출(移轉支出)을 통한 사회적 재분배정책 역시 중요하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활력저하와 사회적인 사고 및 범죄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문제 해결과 치안유지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촉발한다.

이에 20세기 이후 세계는 사회정의론에 입각해 복지와 분배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실현하고 있다.

조세의 역할을 논할 때 그 출발점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세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같은 세금을 걷어도 저소득층과 서민에 징세하면 과거 담뱃세 및 부자감세 사례와 같이 유효수요의 억제 효과가 커져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는 2017~2018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인상을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이뤄냈다. 지난해 필자가 발의해 국회 위원회대안으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에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지난해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역시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기존 90만 가구에서 21만 가구가 증가한 111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자가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두배로 늘리게 되면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 중년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세제지원하고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를 아우르는 지원 방안 역시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구조 혁신과 신기술 신산업 창출 지원 정책도 마련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AI·로봇기술·미래차·바이오헬스 등의 산업육성 정책이 수립돼 그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평화 재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부터 민족의 소원인 통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재정정책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치며

경제는 항상 성장해오고 있으나 경제주체 모두가 그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이 수년간 경제 민주화를 외쳤던 이유다.

「대한민국헌법」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시장의 실패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명석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며 생산력이 높은 우리 국민이 성장에 기여한 만큼의 경제적 혜택을 더 누려야 함은 자명하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눈앞에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꽃을 피우고, 그 재정의 열매를 국민이 수확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재정준칙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재정만능주의와 재정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득도 늘어나며, 경제도 성장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왔다.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만 54조 원을 투입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민간의 임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과거 정부 30~40만 명에 이르던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지난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했고, 특히 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작년 1분기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차이가 5.95배로 2003년 통계생산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잘못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 결국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던 2018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를 기록하면서 이념에 매몰된 잘못된 성장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실

패 경험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계 재정파탄 또는 세금폭탄의 형태로 큰 부담을 떠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올해 재정 현안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재정 현안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 9.5%는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10.6%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지출의 증가율은 최근의 양호한 국세수입 실적 덕분에 국가 재정에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초과세수는 11.8조 원으로 과거 5년 동안 12월 평균 세수가 13.5조 원인 것을 반영하면 올해 초과세수는 2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드러난다. 작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28.5조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63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2022년 국가채무는 2018년 708.2조 원에서 5년 만에 26.8%나 증가한 89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에서 선심성 재정지출의 증가는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출 증가 등 사회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2060년 우리나라의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OECD는 재정정책의 기본 틀은 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사회지출 확대가 포용적 성장 촉진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지출 분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채, 항구적으로 지출이 지속되는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주요 재정사업으로 인해 206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무려 19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¹⁾됐다. 급증한 국가채무 비율을 2016년 수준인 39.5%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세금부담은 2016년 580만 원에서 2060년 6,403만 원으로 11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만능주의와 정부만능주의에 사로잡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며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재정운용은 미래세대에 세금폭탄과 재정파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1) 추경호 의원실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2017년 9월), 4대 재정사업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일자리안정자금)이다.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인기에 영합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을 운용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경제를 살릴 여력도 없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충분한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경제 상황의 위축에 대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른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기 전에 양호한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을 대비하고, 미래의 국민도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다.

정치적 재정운용의 위험성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을 정치적으로 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채발행을 담당했던 前 사무관이 재직 당시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지난 정부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정부의 국가부채 수준을 가능한 부풀려서 현 정부의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재정운용을 수시로 지적받는 현 정권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재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도 이후, 예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8년 2월부터 추경편성을 언급하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00년 이후 최초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을 강행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이 있었기에 기획재정부 前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을 그냥 흘려둘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재정운용에 외부적·정치적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같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재정준칙 제도 도입 및

광의의 부채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가 있는 경우 정치권은 인기에 영합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준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에 초과 채무를 감축해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준칙을 설정해야 한다. 준칙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 비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정부가 임의로 준칙을 설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총지출의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세대에 대한 과도한 현금 지원은 수십 년 뒤의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 또는 재정파탄이라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와 추계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추가되는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심성 정책의 남발을 견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MF·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에 대해서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

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만을 포함(D1)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는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필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 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성장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재정의 수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기반 축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개혁,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노동개혁,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 여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벌써 2년이 지나갔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욱더 힘써야만 한다. 🌐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키자¹⁾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태



우리나라 재정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

현재 한국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으로부터 탈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인 하락세가 지속돼 이미 3%대에서 2%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실물경제는 3% 성장률을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워져 저성장 함정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성장 함정이 고착화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총수요 진작에 소요되는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의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다. 반면에 재정공급 측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며 재정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재정체계가 유지되는 한 재정은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다.²⁾ 4차 산업혁명은 한국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미숙련 노동자

1) 본고는 김성태(2018)와 김성태 외(201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김성태,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재정정책의 방향,"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8.

김성태·임병인·전승훈, 「4차 산업혁명시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2)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의장인 K. Schwab이 주창한 개념이며,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일컫는 용어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D printing, 나노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가능해진 흐름임.



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대신에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신산업 혁신 Platform이 구축돼 Platform 기반의 경제구조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Cloud 기반 산업구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며, Gig Economy와 Platform 경제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임금수준이 수수료 기반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심대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착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원활하지 못해 재정지속가능성이 악화될 것이다. 즉, 기존의 사

회보험 기반의 사회보장정책은 높은 노동시장참가를 전제한 것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환경 하에서는 지속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전체 실업자의 대규모 증가로 소득세수는 감소하기 쉽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수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산업 간·국가 간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디지털 Platform 등을 통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전반적 경쟁강도의 상승, 독과점 심화, 다국적기업 과세의 어려움 증가 등이 부각됨에 따라 감소될 요인이 많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보다 더 큰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특히 노동시장의 붕괴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불 때 불확실성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대두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불확실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다.

김성태 외(2018)가 제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생애주기의 기본소득체계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며 사회보험은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의 정합적인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출생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만 20세)까지는 청소년 기본소득을 제공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부터 은퇴하는 시기(만 65세)까지 경제활동 기본소득을 제공받으며, 은퇴 이후에는 노령 기본소득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2018~2050년 기간에 매년 GDP의 10.3~15.6%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³⁾ 재원조달방안의 기본 전략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우선 현행 부가가치세를 10%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 다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여 충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재정공급 능력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재정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고 재정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적 요인이 합리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문제를 순수하게 재정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통

상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도모하며,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는 세금 징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국채발행과 같은 정부부채를 늘려 재원을 조달하려고 시도하기 쉽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악화되고 현재 세대의 세 부담이 미래세대의 세 부담으로 전가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세대 간 갈등문제를 배태하게 될 개연성이 커진다.

전환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경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시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아우르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정책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적극적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에, 재정적자의 누적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궁극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대비용이 기대편익을 크게 능가할 것이므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김성태 외(2018), 앞의 책.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동태적 예산 제약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100년간 정부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집행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전제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 세대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정부와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는 경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공채 발행에 의한 국가채무의 영원한 돌려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소위 ‘No Ponzi Condition’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은 불가피하나 증가 속도와 그에 대한 부담이 동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결국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세대의 국가채무의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의 증가로 귀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20% 내외인 조세부담률은 4~5%p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해 향후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증세의 전제조건이 지출 효율화가 되는 ‘선(先) 지출 효율화, 후(後) 증세’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을 효율화한 후

에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통하여 조달하는 원칙에 따라 실천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성공적인 증세를 위하여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증세는 어느 정도든 단행하지 못하므로 여야가 중기적인 증세방안에 대해 합의한 후 정치 환경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중장기 세계개편위원회’를 결성해 세계개편방안과 특히 증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에 대해 결정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시에 과감하게 충분한 재정지출을 집행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상시적으로 이용해 경기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의 이용이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재정적자를 통해 국가채무만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압박해 경제에 음(-)의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재정의 보험 기능을 살려야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6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재정이 당시까지 건전하게 운용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미래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의 건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 재정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돼야 할 정책목표는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2019년도 재정현안과 과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정기반 강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



서론

보육대란으로까지 불렸던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게 된 것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법)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3년 한시법인 유특법이 내년 말에 단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일시적으로 봉합된 중앙과 지방의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누리과정사업이 후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가 만료되기 전인 지금 누리과정 보육사업의 재정수요를 추정해 필요재원의 규모를 파악하

고, 실행가능하며 안정적인 보육사업 재정의 확보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유특회계의 연장을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정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법제화를 포함한 정책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각 대안을 평가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지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 2015년에는 전액을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2015년 세입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결의하면서 채용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누리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목적예비비 편성,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의 대응을 하며 적극 노력하였으나, 갈등과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12월에 보통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를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리하고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 보육료 필요재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2017~2019년) 지원하는 유특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채용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유특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부분적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과 교육부로의 재정관리 주체 일원화 등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교육세와 국고지원의 재원 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리과정 사업에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정부의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부담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교육청 사이에 다양한 쟁점이 표출되었으나, 단기적 시계 하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라는 단순하고 제한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서둘러 무마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에 가깝다. 먼저, 유특회계를 설치한 것은 교육보육과정의 통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령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매우 미흡하다. 또한 특별회계의 운용 주체인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수행 기능은 매우 미약한 상태다. 문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종류만을 밝



히고 각 재원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장기적 시계 하에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논의가 단기간에 급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한시적인 체제의 형태로 결론나면서 제도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0~5세 전면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육사업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보육료 재원의 한계로 인해 보육료 단가는 오랫동안 정체돼 왔다. 이에 따라 낮은 보육료 단가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 재원의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 차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격차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보육기회의 공평한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재원충당이 아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다. 즉, 안정적인 체계하에서 향후 재원조달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확보된 보육재정이 실제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집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합리적 운영체계라는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과정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이며,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보육사업과 관련한 예산·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육사업의 재정확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특회계의 연장 여부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의 복지부 재이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처의 정책목표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의 3가지 주요 대안을 검토해본다.

● 가. 유아교육특별회계 연장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현재의 유특회계 체계 내에서 보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는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현행 유특회계를 다시 연장하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이 해당한다. 이 방안의 장점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부처 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한 채 유특회계를 단순 연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으며, 특별회계 내 재원구조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운영체계를 장기화하고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보육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사업은 유특회계 내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

지 않다. 따라서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분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단일 회계 내 사업의 수행은 동일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함으로써 특별회계 연장 방안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여건이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재정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특회계 내 누리과정 사업의 재원은 일원화 하되, 보육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의 계정을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원화된 관리 체계가 지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실제 사업운영을 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격차 해소 이후에 통합부처가 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특별회계 연장과정에서 한시적인 현 체제를 장기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소요 비용을 국고와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재원조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복지부 재이관

어린이집 누리과정사업의 재정기반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복지부로 재이관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주력하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근거법률과 기관의 성격은 물론 관리부처도 다르며, 정부지원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유특회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간의 통합은 회계 측면의 형식적 통합에 그쳤을 뿐이다. 교과부에 의한 유아교육·보육사업 운영의 실질적 일원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하는데, 보육 환경과 현실은 물론 현재 유치원 운영관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거의 20년에 걸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반발로 실질적인 통합 노력은 제대로 가시화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립유치원의 운영 및 관리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인위적인 유보통합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현행 유특회계 체제 내에서 정합적인 유아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즉각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부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이원화된 재원구조 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특회계를 단순 연장하기보다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복지부로

환원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0~5세 보육은 복지부에서, 3~5세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병행 중복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장점은 부모 선택권을 제고하고 각각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유보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과 부처 간의 협력관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관리방식 차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 아동·보육특별회계 신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복지부 재이관 이후에는 아동 및 영유아 보육·양육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칭) 아동·보육특별회계 편성을 추진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나열식 정책과제들의 통합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 재구조화의 취지는 아동 및 영유아 보육·양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단일한 특별회계 내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기본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현 어린이집 국고 지원분)과 지방교육재정 중 지자체 일반회계전입금 일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저출산이나 아동·양육 관련 특별세입을 추진하거나 보육서

비스 이용료(보육 부담금)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출사업의 구성은 현재의 영유아 보육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은 물론,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여건상 아동·보육특별회계 도입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정책 기조 전환에 맞춰 통합적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동 및 영유아 대상의 보육·양육 지원정책 간 상호연계와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잘 부합하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해 보육·양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육 지원은 사업의 고유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운영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도 아동·보육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운용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아동·영유아 관련 재정수요 증대로 저출산과 아동·양육 관련 특별세입이 신설되거나 보육서비스의 이용 부담금 부과를 통해 보육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동·보육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간에 서로 담당해야 하는 사업영역의 특성이 상이한 만큼 보육권을 확립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각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통합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운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박현석

민주화 이후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공방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새해 예산이 새해가 돼서야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내실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12월 1일에 정부의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며,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 이전에 비해 국회가 심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고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라는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가? 2012년에 입법 도입된 이 제도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2014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 성급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로 판단할 때에는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법정기한을 준수하거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중요한 도입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국회의 심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안이 이전에 비해 충실하게 심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심사기간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지만 국회의 예산심사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년 연말에 마무리된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8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최악의 경우 새해 벽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처리 시점으로 볼 때에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기한이 끝날 무렵까지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벌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밀실에서 협상하며 줄속으로 심의를 마쳤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각당의 실세들이 거액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은 올해에도 반복됐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안 자동부제도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하여 12월 초에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의 협의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심의 기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밀실 심의와 이른바 ‘쪼지 예산’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예산안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심사하

고 감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취지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유권자를 대표해 국회가 심사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유럽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전제 군주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투쟁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인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의 예산지출 계획을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예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학자는 18세기와 19세기 대영제국의 번영을 설명하는 요인의 하나로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통제를 꼽고 있다. 조세제도를 개편해 정부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통제를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전쟁 등에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관



리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관리 감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국민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정치논리에 휘둘러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실한 심사를 진행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며 정당의 정치적 목적과 지역구의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인보다는 예산 전문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사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기능을 약화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의 하원 사이에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때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2019년이 시작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공무원의 월급 지급이 중지되는 등 정부 폐쇄가 된 사례가 그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산안 자동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야가 늦어도 12월 초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게 된 이유는 자명하다.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여당과 야당은 정

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의 예산안을 수정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야당은 자신들의 정책 의제를 예산안에 반영할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배정을 통해 지역구 사업을 챙길 수도 없게 된다. 여당의 경우는 정부와 정책 의제를 공유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여당 의원들 또한 재선을 위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원하지 않는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말연시에 몰려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늦어도 12월 초에 미리 심의를 한다고 해서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처리된 2014년도 예산안은 새해 1월 1일에 통과됐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3년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예결위는 12월 4일이 되어서야 회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국회의 예산 심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심사를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적용된 2015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2014년 9월 22일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예결위는 11월 6일에 회의를 시작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정부는 9월 11일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 예결위는 10월 28일이 되어서야 회의를 시작했다.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도입되면서 심사 일정이 한달씩 앞당겨졌을 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마감 시한에 닥쳐서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에 휘말려 줄속으로 심사되는 관행은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시점이 한달씩 앞당겨졌을 뿐 실제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개별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는 예산안 심사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 예산안의 자동적인 본회의 부의를 미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근거로 이른바 ‘소소위’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기구를 만들어 여야 간의 밀실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참여자의 숫자를 줄이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협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비공개 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하는 상황은 개별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구 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예산안의 밀실 협의를 원내대표가 주도하면 예산과 관련된 각종 요청을 해야 하는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산안 심사를 연장

시키고 ‘소소위’를 가동해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기간 내에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을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여야 간의 대립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는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있지만 국회와 정치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투쟁하고 토론하는 장이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과 함께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라고 선발된 대표다. 여야 간의 논쟁과 국회의원의 활동이 예산안 심의를 내실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물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기록에 남고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소소위’에서의 협의 과정을 없애고 회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면 여야의 원내대표단이 배후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의 공개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면 의원들은 예산안 수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현재와 같은 밀실협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를 통해 예산안 심사의 시기를 앞당긴 만큼, 이제는 예산안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

PART.01

NABO 칼럼
논단 ②2019년
대외경제 여건 분석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도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018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로 증가해 전년도의 3.1%에 비해 하락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및 선진국 고용시장의 호조 지속 소식과 대비되며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세의 수혜를 벗어나 뒤처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안겨준다.

한편,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시장가격이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년간 이어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작년 통

관 기준 6,055억 달러 수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관계로 올 초부터 수출 급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더하여 작년 하반기 급속히 진행된 미·중 통상마찰은 단기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모양새가 아니다.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가까이 되고 미국도 12%에 이르고 있어 양국 간에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시 돌아가 한국은행의 발표를 살펴보면, 작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중 수출의 기여도는 1.7%p로 2017년 0.8%p에 비해 상승하면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지난 1월 21일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작년 세계 경제는 3.7% 성장하면서 2017년 3.8%에 비해 성장세가 약간 둔화됐다. 미국의 성장률이 2.2%에서 2.9%로 크게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성장을 홀로 견인했다. 하지만, 유로지역은 2.4%에서 1.8%로, 일본은 1.9%에서 0.9%로, 중국은 6.9%에서 6.6%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2017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회복이 진행된 러시아, 브라질, 중동 등 일부 자원수출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2017년 대비 성장률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IMF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었는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9년 세계경제 전망」 발간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3.5% 성장하며 작년의 3.7%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통상분쟁의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성장이 고점을 돌아섰다는 판단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이러한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월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했으나 10월에는 3.7%로,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3.5%로 거듭 하향 조정했다. OECD도 작년 3월 3.6%에서 3.9%로 상향 조정 후, 9월에는 3.7%로, 11월에는 3.5%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중앙은행들

은 앞다투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고 이후 금리 인하가 한계에 다다르자 국채매입 등을 통해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13년 긴축발작 이후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지난 2년여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25~2.5%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인상했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보유자산도 줄이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도 그동안 진행하던 양적완화를 작년 말부터 멈추고 보유자산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일부 신흥국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통화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화긴축 기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첫째, 선진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신흥국의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진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로 인해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글로벌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본적인 거시지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러한 우려가 확대됐다. 둘째, 누적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 및 정부의 지출을 제약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부실채무 비율을 높여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작년 미국은 트럼프의 세계개혁으로 실질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였다. 하지만, 감세 중심의 세계개혁은 세수를 감소시켰고, 국방비 증액과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 확대로 재정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책 도입 초기 촉발된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5년 정부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도입,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6월 이 목표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이유는 금융완화와 성장전략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이 초래한 성장률 저하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뒤이은 추가 인상 계획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가져올 경기 하방압력이 있지만,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정부부채의 부담 누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통상분쟁 장기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에 대응할 방침이지만,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의 누증으로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환경의 전면에 부상한 자국중심주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의 형태로 지속되다가

작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됐다. 갈등 초기에는 수입관세 인상 등 무역장벽 강화가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으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양국 간 장기전략의 충돌임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및 기술 탈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 제조 2025’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우선주의는 최근 다자협력기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5년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었으며,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의 정상회의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특히 정상선언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항에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했음을 적시하며 독자적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은 다자협력기구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위해 1995년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넓혀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도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신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세 배 가까운 재정적자를 수반해 EU가 승인을 거부한 후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었

는데,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의 결과 재정 적자가 EU의 기준선인 GDP 대비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EU 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렉시트 시한이 3월 29일로 다가오고 있으나,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으로 난항 끝에 협상을 끝낸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난 1월 15일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대안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해온 우리 경제는 올해에도 어려운 대외여건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와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 등 주요 위험요인은 현재 우리 경제의 고민인 저성장, 가계부채, 수출의 지역 및 품목 집중화 등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추격 속도 둔화 및 불공정행위 시정에 따른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아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낙오된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서 그들이 경쟁의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



PART. 01

NABO 칼럼
논단 ④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결과 및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쟁점 사항



국민연금연구원장
이용하

재정계산의 의의 및 제4차 재정계산 주요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고령화, 물가 및 임금 상승 등 인구·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 적립기금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도입된 이후 3차례의 재정계산(2003년, 2008년, 2013년)이 수행됐고 2018년에 제4차 재정계산이 실시됐다. 제4차 재정계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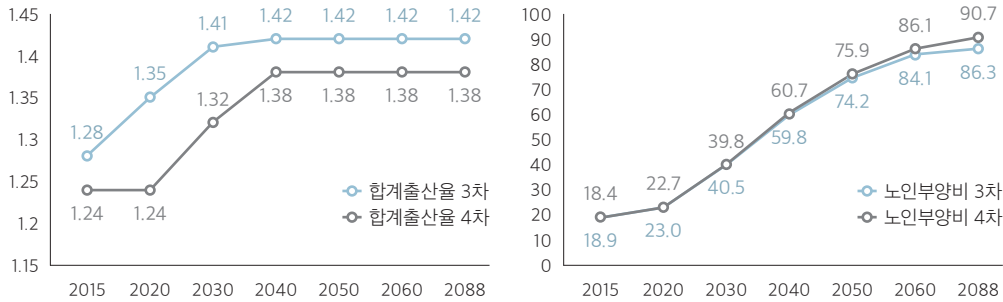
먼저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¹⁾ 40%) 향후 70년간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상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향후 2088년까지 기금상황을 전망한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 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나,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지적자시점은 2044년에서 2년 당겨졌고 기금소진시점도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졌다. 제3차 재정계산 결과에 비해 기금소진 시기가 앞당겨진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진 출산율과 높은 노인부양비 등의 인구구조변화를 대표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함.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대비 최초 연금월액의 비율로 2019년 현재 44.5%이며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에 40%가 되도록 조정됨.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노인부양비 가정

(단위 : %)



주1 |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 중위가정을 적용
 주2 | 노인부양비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자료

표 1

필요보험료를 시나리오

(단위 : %)

보험료 인상시점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2020년	16.02	16.28	18.20	20.20(18.2)
2030년	17.95	18.27	20.22	22.20(14.8)
2040년	20.93	21.36	23.04	24.88(10.3)

주1 | 적립배율이란 해당연도(2088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
 주2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란 일정기간(약 20년, 2069~2088년) 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
 주3 | 필요보험료율이란 각각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의미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향후 70년 후에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인가? 제4차 재정계산 결과 2088년 당해 연도에 지급할 급여액을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보험료 인상시점에 따라 16.02%에서 20.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출하는 구조 하

에서 장기적으로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재 보험료율 9%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쟁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이에 정부는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4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둘 것이냐’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6.5%이며,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공적연금의 미성숙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되고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되었으나 아직까지 납부예외 및 장기

체납자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은 실정이다²⁾. 특히 현 세대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고 빠르지 않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액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개인기준 약 95~10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원, 2018). 2018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약 39만 원이고 여기에 기초연금액(2018년 기준 25만 원)을 합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



2) 2017년 말 기준 평균 노령연금액은 약 39만 원에 불과함. 또한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전망자료에 따르면 향후에도 평균가입기간이 약 27년에 불과하여 연금수급액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앞서 재정계산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됐고 이것은 제3차 재정계산에 비해 빨라졌다. 인구구조 변화 즉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도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 강화’에 대한 쟁점은 제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는데,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두 개의 패키지로 제시됐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정계획을 중지³⁾하고 2019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방안(급여-재정패키지 ‘가’)이며⁴⁾, 다른 하나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40%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후세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급여-재정패키지 ‘나’)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52.2%)과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는 의견(43.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에 정부는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개혁의 목표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National Minimum)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⁵⁾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방안을 제시했다.(그림 2 참조) 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50% 범위, 기초연금은 30~40만 원 범위, 보험료율 인상은 9~13%의 범위 내에서의 4가지의 정책조합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최저노후생활보장은 기초연금 강화(2022년 이후 40만 원 지급) 방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5% 인상 및 50% 인상방안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즉 세 가지 방안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급여액이 91.9만 원에서 101.7만 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인 약 1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인상 또는 50%로 인상하더라도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현재보다 약 5~6년 늦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제4차 재정계산 결과 향후 70년 후 연금지급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이 최소 16%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3)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은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여 2028년에 40%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4) 물론 급여-재정패키지 ‘가’안도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는 소득대체율 5%p 인상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것임.

5)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결과 (1) 63.4%는 현행보험료가 부담, (2) 53.9%가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 (3) 47%가 현행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또한 조사대상자의 49.6%는 기초연금 지급수준(30만 원)이 적당하고 26.3%는 적다라고 응답함.

그림 2

정책조합방안의 주요내용


		현행 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40만 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21년 45%	'21년 50%
	기초연금	'21년 30만 원	'21년 30만 원 '22년 이후 40만 원	'21년 30만 원	'21년 30만 원
국민+기초 실질급여액		86.7만 원	101.7만 원	91.9만 원	97.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소진시점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주1 |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주2 | 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 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이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한 금액 기준(연계 감액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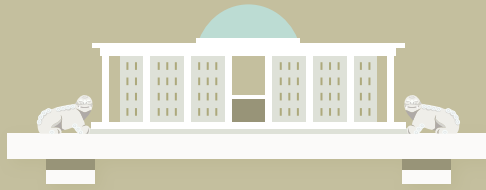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저자재구성

종합해보면 이번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이 소진되기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가개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남아 있다. 최저노후생활비의 보장을 목표로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적정 노후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정계산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이루어낸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4차 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 2018.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자료」, 2018.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PART
02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41

국가채무시계 소개

43

숫자로 보는 정책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46

2018년 NABO 주요 업무 성과

47

최신 분석보고서 소개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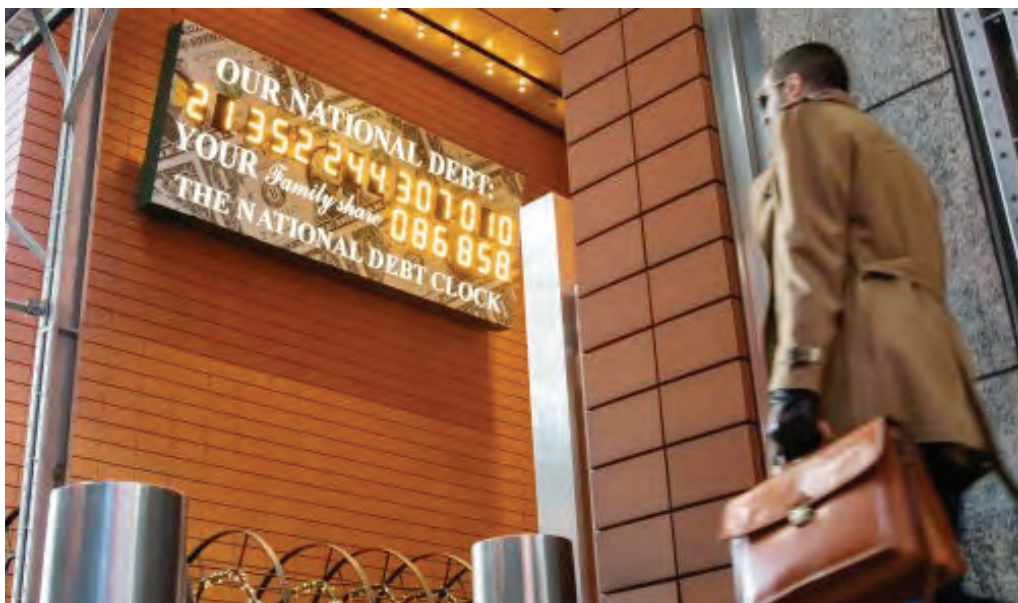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윤여문

국가채무시계 소개



미국 뉴욕의 한복판인 타임스퀘어 인근 건물 벽면에는 전자시계 하나가 설치돼 있다. 바로 미국의 국가채무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채무시계(National Debt Clock)이다. 이 시계는 1989년 부동산업자인 세이모어 더스트(Seymour Durst)의 후원으로 설치된 후, 2019년 1월 11일 현재 21,352,244,307,010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계 설치 당시 2조 7,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국가채무가 30여 년 만에 21조 달러까지 증가한 것이다.




미국 뉴욕 West 43번가의 국가채무시계(2019.1.11.)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보여주는 한국판 국가채무시계가 있다. NABO 국가채무시계도 2013년 9월 처음 게시된 이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15일 현재 705조 5,31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말 38.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9%를 크게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2000~2017년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연평균 11.5%로서 OECD 32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NABO 국가채무시계는 이렇듯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는 2018년 말 700.5조 원에서 2019년 말 740.8조 원으로 40.3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시계는 이를 1년 31,536,000초로 나누어 1초당 약 128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시각적 편의를 위해 숫자는 3초마다 바뀌고 있다.

미국 국가채무시계에는 당초 숫자 앞에 달러 표시 기호(\$)가 붙어 있었는데, 2008년 9월 국가채무가 10조 달러를 돌파하며 시계 액정의 자릿수가 모자라 현재는 달러 표시를 삭제한 채 운영하고 있다. NABO의 국가채무시계는 현재 1,000조 원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나 아직은 맨 앞자리가 0으로 비어 있다. 부디 NABO 국가채무시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접속: 2019. 2. 15.>

숫자로 보는 정책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김재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서비스를 개시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는 500여 종의 재정·경제 분야 통계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200여 종의 상임위원회별 정책통계는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도 포함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NABOSTATS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계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NABOSTATS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책지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OECD 평균에 가까워진 청년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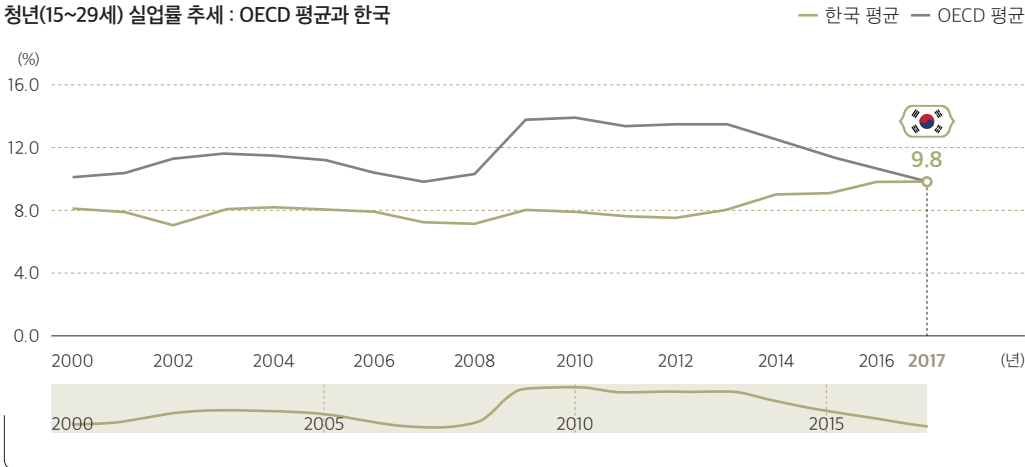
한국은 지금까지 청년실업을 비롯한 지표상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알려졌다. 특히 지표만을 봤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면서 낮아지는 한편,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구조적 요인 등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한국 청년실업률은

9.8%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다행히 올해 초 발표된 2018년 OECD 비교 기준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3%p 낮아지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통계 발표는 국제적인 통계 취합 과정 등의 요인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시차가 있어 현재로서는 2018년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2018년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이 발표되는 경우 NABOSTATS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림 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세 : OECD 평균과 한국



주 |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며,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제외) 기준
 자료 | NABOSTATS 재정·경제통계-간략조회-‘OECD 실업률(15~29세) 비교’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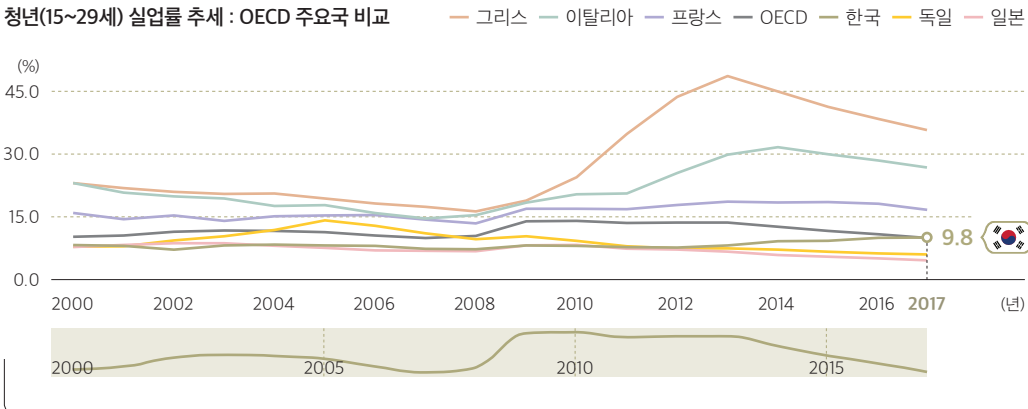
2008년 이후 청년 고용상황의 국가별 분화

2008년 이후 OECD 청년실업률은 권역별·국가별 추세의 분화가 특징적이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가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청년실업률이 급등했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국가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추세와는 괴리

그림 2

청년(15~29세) 실업률 추세 : OECD 주요국 비교



주 |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며,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제외) 기준
 자료 | NABOSTATS 재정·경제통계-간략조회-‘OECD 실업률(15~29세) 비교’ 항목

표 1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 OECD 주요국(2017년)

(단위 :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OECD 평균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35.6	29.4	26.7	16.5	9.8	9.8	8.1	7.2	5.8	4.4

자료 | NABOSTATS 재정·경제통계-간략조회-‘OECD 실업률(15~29세) 비교’ 항목

된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NABOSTATS 두 배로 활용하기

통상 청년고용에 관해 OECD 비교 통계를 인용할 때는 우리나라의 사회진출 연령상의 특성 때문에 15~29세 기준 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원본통계 제공 사이트인 OECD Statistics에서는 15~29세 고용통계항목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15~24세와 25~29세 항목을 별도로 보여주

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 외에는 청년고용에 대한 국제비교통계를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NABOSTATS에서는 빈번하게 인용되는 15~29세 통계를 OECD Statistics자료를 기반으로 재가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클릭 한 번으로 항목(위 통계의 경우 국가)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유럽 남부 지역에 분포된 지역적인 특성도 통계지도 메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림 3

청년(15~29세) 실업률 추세 : 통계지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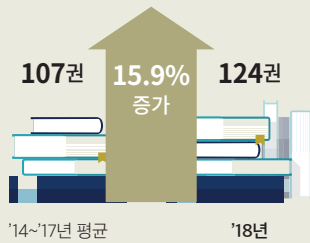
자료 | NABOSTATS 재정·경제통계-간략조회-‘OECD 실업률(15~29세) 비교’ 항목

PART.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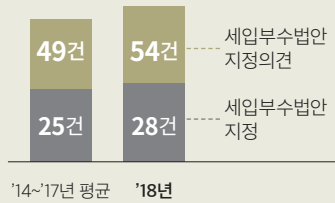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2018년 NABO 주요 업무 성과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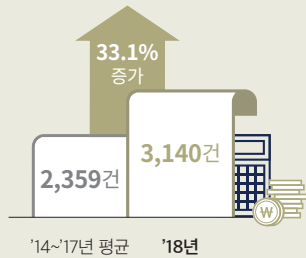
세입부수법안 지정의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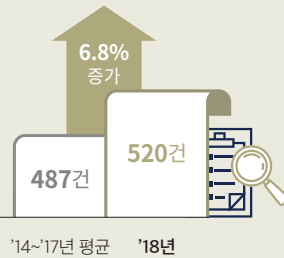
토론회 등 공론의 장 마련



법안비용추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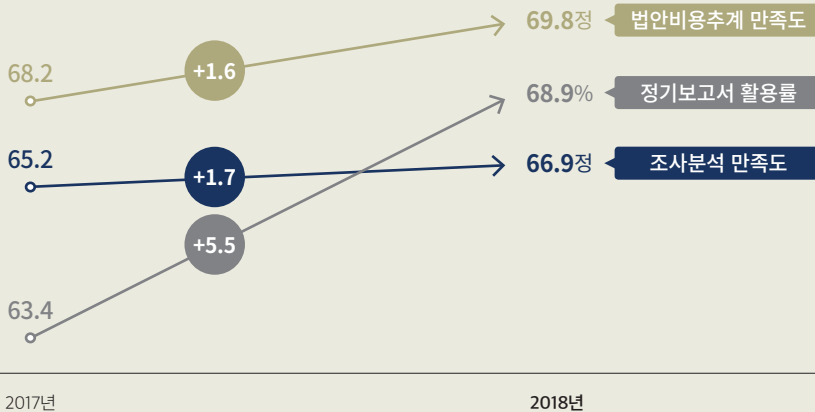


조사·분석²⁾



2018년 의정활동 만족도

(국회의원실 대상)



주1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주2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및 분석

PART. 02

의정활동지원
재정전문기관
NABO

최신 분석보고서

구분	실·국	과	제목	발간일
정기 보고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8. 11. 26.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2018. 11. 26.
		경제비용추계과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2018. 11. 26.
		행정비용추계과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2018. 11. 26.
		사회비용추계과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 12. 11.
		재산소비세분석과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8. 12. 14.
		추계세제총괄과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8. 12. 28.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2018. 12. 6.
		산업고용분석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2018. 12. 10.
		거시경제분석과	중국경제 현안 분석 - 부채·부동산·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2018. 12. 27.
정기 간행물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제8호)	2019. 2. 22.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6호)	2019. 2. 25.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제73호)	2018. 11. 20.
			NABO 경제동향 & 이슈(제74호)	2018. 12. 14.
			NABO 경제동향 & 이슈(제75호)	2019. 1. 18.
			NABO 경제동향 & 이슈(제76호)	2019. 2. 22.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4호)	2018. 11. 30.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5호)	2018. 12. 17.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6호)	2019. 1. 28.	

북한 경제개발 자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정부 측 설명에 비춰 보면 남북한 양자협력 방안이 구체적인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도 남북경협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 재정의 유한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수요, 조달 가능한 자원 유형 및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동향과 사회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교통 에너지 금융 등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수요를 파악했고,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연계가능한 자원의 유형별로 잠재적 규모,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개혁개방국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중심 민간협력금융을 통한 자원 조달 방식과 절차에 대해 검토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 되는 경우 한국의 재정, 주변국의 양자협력 자원,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자원, 국제 민간자본 등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국가별 최대 지원 규모의 3개년(2015~2017년) 평균은 세계은행의 경우 양허성 용자 18.0억 달러, 일반용자 24.6억 달러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양허성 용자 2.1억 달러, 일반용자 9.7억 달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국가협력전략 작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는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조달 가능한 자원의 실제 규모는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편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해 북한의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8 정기국회는 정부안 19건, 의원안 556건 등 총 575건의 국세 관련 세법안을 논의한 결과 12월 8일 예산안 및 개정세법에 대한 의결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국세 수입예산도 294.8조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 27개 소관법률 중 17개 법률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기재위 대안을 의결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법안은 계류시키기로 했다. 한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대안은 12월 8일에 기재위 대안이 의결됐다. 2018년 12월 7~8일에 걸쳐 심사대상 세법 27개 가운데 앞서 계류된 6개 법률을 제외하고 21개의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기국회의 세법 개정 및 세입예산안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예산은 299.3조 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5조 원이 감액돼 294.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3.3조 원 및 세입예산안 발표 후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조치 효과 -1.3조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효과 0.3조 원 등이 반영된 수치다.

3대 세법 개정 항목으로는 근로 자녀 장려금(EITC·CTC)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있다. 우선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내용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통과됐고, 자녀장려금 확대방안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세법은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 폐지, 소득 재산요건 완화 등 신청자격을 큰 폭으로 완화해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고,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했다.

또한 자산보유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 발표 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추가 강화방안이 포함된 9·13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며 9·13대책 관련 의원안을 포함한 대안이 의결됐다. 개정세법은 9·13대책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비율 상향, 세 부담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단계적 상향조정 내용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국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019년 이후 15%로 4%p 인상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0월 30일)에 따르면 2020년 6%p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중국경제 현안 분석

- 부채·부동산·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누적된 부작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는 세계 경기 여건에 민감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다. 본보고서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부채문제,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의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만일 부동산가격 하락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지방정부, 그림자금융,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자금융 위험의 경우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낮추고는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구를 통한 그림자금융의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위협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위협요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지난 2016년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이후 우리나라 재정여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수의 증가 여력은 둔화되고 있고,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2019년도 확정예산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 정책이 향후 32년(2019~205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재정변화를 전망했다.

총수입은 2019~2020년 GDP 대비 25.6%로 정점에 다다른 이후 2050년 GDP 대비 2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2019년 GDP 대비 25.2%에서 2050년 GDP 대비 3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동 기간 0.4%에서 -7.1%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50년 -4.5%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8.4%에서 2050년 8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3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되는 것으로 그 기간 경제 여건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전망 결과 역시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량지출 및 재정준칙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전망 결과(2050년 기준 85.6%)와 비교했다. 첫째,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7년 11.8%로 수렴된 후 유지된다는 가정 시, 재정전망 결과보다 3.2%p 하회할 전망이다. 둘째,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7년 12.3%로 수렴된 후 유지된다는 가정 시, 재정전망 결과보다 7.3%p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독일의 채무준칙으로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을 -0.35%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의 적용 가정 시, 재정전망 결과보다 58.4%p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중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을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적용 가정 시, 재정전망 결과보다 11.8%p 하회할 전망이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75호)

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여건은 악화됐으며, 수출은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부진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II.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소비지출 특징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비와 통신비 지출로 인해 국내 소비에서 서비스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융위기 이후 교육서비스지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서비스소비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서비스소비지출은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가구일 경우와 연령이 높아질 경우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취학자녀수는 교육서비스지출과 유의한 정의관계를 나타냈으나, 그 외 서비스지출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III. 지속가능 공공구매 현황 및 공급유인 분석

공공구매(조달)는 연간 123조 원 규모로 중요한 정책실현의 도구이며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구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색공공구매의 공급여부 및 공급금액에 대해 기업 고유 요인(지역, 업력, 업종 등), 재무요인 및 혁신투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업력이 길고, 매출액이 클수록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이 녹색공공구매(GPP)를 공급할 확률이 높고, 혁신투자를 많이 할수록 GPP를 공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ABO 산업동향 & 이슈(통권 제16호)

I. 산업 무역 산업여신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산업 무역) 제조업 생산은 11월 중 전월비 감소(-1.9%), 전년 동월 대비 증가(0.1%)했다.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12월 중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와 -1.0% 감소했다. (산업여신) 산업여신은 2018년 3분기 중 규모가 큰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107조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9.3%, 건설업은 0.8%, 기타업은 4.7% 증가했다.

(에너지) 2018년 3/4분기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각각 9.9%와 12.0% 증가했다.

II.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90년대 이후 우리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가계부문에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됐다. 1991~2016년 기간 중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균형이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크고, 서비스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서비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해 임금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전통적 자영업 업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지출 등 사회안정망의 점검 및 확충이 필요하다.

III.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과 시사점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지만, 최근 신규 가입 증가가 둔화되거나 유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층적 연금구조가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한 연금상품에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의무 가입이나 연금수령 등을 준수해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한 자산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면서 일부 일임형 실적형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정기예금 수익률(1.65%)을 하회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비경제활동인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보완, 납입유예(중지),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및 비교공시 확대, 가입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ART
03



nabo 人side

55
NABO와 사람들
예산분석실

60
NABO 인사 동정

nabO와 사람들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의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올해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산분석실의 주요 업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여봅니다.

글 예산분석실 · 사진 문영진



(앞줄 왼쪽부터)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뒷줄 왼쪽부터)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분석을 통해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예산분석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분석실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의 재정사업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결산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실은 총 7개 과로 구성되며,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이상 4개의 예산분석과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등 3개 평가과는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거나 공공기관 수행 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Q 말씀하신 대로 예산분석실은 예산분석과와 사업평가과로 크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두 업무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7년 8월 직제 개편으로 사업평가기능이 예산분석실에 통합됐습니다. 예·결산 업무는 세부사업 단위의 단년도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채택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 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평가 업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업평가는 예산분석실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배분이나 집행부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요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기능입니다.

Q 예·결산 분석에 있어 예산분석실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산분석실은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와 같은 재정총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정총량에 대한 분석은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등 우리 처 내의 다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망한 대내외 경제여건,



예산분석실 과장 회의

재정운영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혁신성장과 같이 여러 부처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이나 정보화·R&D,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유형별 주제를 선정하고 집행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분석실만의 독자적인 분석업무는 매년 발간되는 예·결산 분석시리즈의 총괄분석보고서에 수록되는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예·결산 분석 업무를 하면서 중립성 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예·결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 대상 사업의 목적, 수혜 대상, 집행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예산분석실의 분석관은 각 부처의 사업설명자료, 과거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 언론보도내용 및 관련 연구문헌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민하고, 분석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분석실의 분석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분석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과 단위, 실 단위의 심의회를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분석의 오류나 분석관 개인의 편차(bias) 등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간된 2017회계연



2019년도 예산안 분석 업무협의(헌법재판소)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업무협의(산림청)

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국회 의원 활용도는 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수준 높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사업평가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사업평가의 대상은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이지만,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이나 정부 보조금, 출연금, 용자금 등으로 수행하는 정부 지원 예산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평가는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거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공공기관의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 민간 분야와의 경합 여부, 법령 및 지침 위반, 사업계획의 미흡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회 결산시정요구 사항, 예산 증·감액 사업의 반영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실장님은 2018년 7월부터 예산분석실장을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실장으로서 2018년의 소회와 2019년 예산분석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결산 분석 업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연, 출자, 보조사업과 같이 재정지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분석대상기관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국회예산정책처 슬로건

도 정부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실제 사업수행자로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7월 말 예산분석실장에 부임하자마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재정규모와 집행구조를 분석하면서 크나큰 책임감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슬로건과 같이 좋은 보고서를 통

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쓰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평가업무를 강화해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분석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bO 인사 동정

승진	송수환 (2019.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관 • 기획관리관 	이동훈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이사관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동한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관리담당 	김경연 (2019.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주무관
	이우영 (2019.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주무관 		
전입	박철호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이사관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공춘택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이사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김정규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이사관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홍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최성민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택균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은영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광근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전보	임명현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이사관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권순영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하상우 (2019.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윤희호 (2019.0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조흥연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황준연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관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하정희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어예원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민성철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임명	여은구 (2018.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임기제 5급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보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분석관보 	정성영 (201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임기제 6급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보 •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거버넌스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선영 (2019.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온세현 (2019.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파견 복귀·복직				



PART
04

nabO Life

62

한 토막 경제 상식
나 몰래 '잠 들어 있는' 내 돈,
격하게 깨워보자!

64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트럼프 정부 35일 최장 섰다운...
경제 주름살, 증시에도 영향

66

2월 국회 문화 행사

나 몰래 '잠들어 있는' 내 돈, 격하게 깨워보자!

휴면예금, 통신미환금액, 보험금,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겠어~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 외에
특별히 신경 쓸 계좌가 없는
월급쟁이들에게 숨어 있는 내 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흠, 속이 흰히 보이는
유리지갑만 있는 우리들에게 숨어 있는
돈이 어디 있겠냐?”고 콧방귀를 뀌 지도
모르겠다. 기껏해야 월급통장과 마이너스
통장만큼이나 안쓰러운 주식계좌가
전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다 보면 희미하게 남아 있는
불씨를 발견하는 행운이 올 수도 있다.

글 김영민

내 돈을 찾아줘...
숨어 있는 알토란 같은 휴면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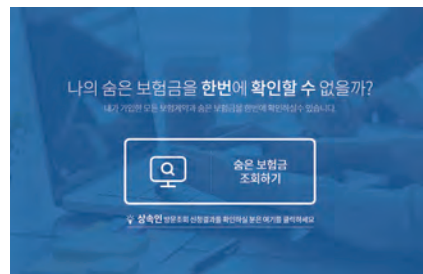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메인 화면

김 군은 우연히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가 뜨는 걸 보고 호기심 삼아 '계
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근데 이게 웬 떡이냐, 무려
8,126원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게 아닌가! 어디
그뿐이라. 대학입학 때 만들었다가 깜박 잊고 있었
던 통장도 덤으로 찾아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은행 및 서민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
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50만 원 이하)
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연합회도 '휴면계
좌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
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
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
청'에 들어가면, 휴면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어코 찾아내리... 공돈 아닌 공돈 '보험금' 찾기


내 보험 찾아줌 https://cont.knia.or.kr	
---	---



'내 보험 찾아줌' 메인 화면

불시에 닥칠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틈틈이 내 온 각종 보험료. 만기가 지났을 때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보험지급금인데,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으로 몸을 내던지다 보면 까맣게 잊을 수도 있는 법. 2018년 11월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가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 125억 원(240만 5,000건)이나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 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했다. '내 보험 찾아줌'은 한번의 검색으로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중도보험금이나 만기 혹은 사망, 휴면보험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으로 약 9조 8,130억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을지도 모르니 속는 셈치고 한 번 접속해보자.

Show me the money... 통신미환금액은 나의 것!

스마트 초이스 www.smartchoice.or.kr	
---	---



스마트초이스 '알뜰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화면

통신 3사(SKT, KT, LG U+)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에서는 통신미환금액을 찾고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통신미환금액'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면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법인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는 미환금액 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20개 알뜰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한 비교, 추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통 3사 요금제 443개와 알뜰폰 요금제 1,045개 중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비교 검토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바꿀 계획이라면 적극 이용해보길... 🌐

트럼프 정부 35일 최장 섯다운... 경제 주름살, 증시에도 영향

국민 불편했지만, 쓸모 적은
국경의 장벽예산 줄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12월 22일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다. 이른바 섯다운(shut down, 예산안 처리 무산에 따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이었다. 섯다운은 새해 들어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섯다운이 장기화하면 정부 기능이 멈추면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돼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는다. 매주 또는 격주로 받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생계도 불안해진다. 그 결과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등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글 양재찬(더스쿠프(The Scoop) 대기자·한양대 겸임교수)

이번 섯다운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이미 수백억 달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장벽의 건설비용인 57억 달러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업무정지 기간 정부의 서비스 부재로 인한 손실은 물론,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항공편 취소 및 연기,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수입 손실, 국립공원 폐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35일간의 섯다운 사태를 반영해 미국의 올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기 부진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등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 달갑지 않은 대외변수다.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의 섯다운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대통령 대 여소야대 의회 '기 싸움'

미국은 지금까지 21번의 섯다운을 겪었다. 첫 섯다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인 1976년에 발생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다인 8차례 섯다운을 겪었다. 빌 클린턴도 두 차례 겪었는데, 두 번째 섯다운은 21일 지속됐다.

클린턴 정부 이후 17년 동안 섯다운은 없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에는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예산 때문에 16일간 섯다운 상황을 빚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1월 20~22일 사흘간, 2월 9일 만나질 섯다운에 이어 12월 세 번째 섯다운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지대의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섯다운에 들어갔다. 역대 최장의 섯다운 끝에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월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가동하면서 장벽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매년 예산안을 법률(예산법률주의)로 정하며,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다. 예산안의 심의, 의결, 편성까지 의회가 다 한다.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의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권한과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나와야 행정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다.

행정부 독주 견제하는 의회 예산편성권

섯다운은 정치적 문제다. 의회와 연방정부 간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을 정부 뜻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때 빚어지는 사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삼권분립 원칙 아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다.

섯다운은 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일 때 자주 나타난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 발생하곤 한다. 의회와 타협하려 들지 않는 등 독선적이거나 무리한 대선 공약에 집착하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주로 나타나는 '정치판의 기 싸움'이다.

이번 최장 섯다운의 원인인 장벽예산 논란도 그렇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범죄자와 마약

이 밀반입되고 있어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마약단속국 보고서를 보면 마약은 대부분 공항·항구 등 합법적 입국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고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진통 끝에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2월 15일 장벽예산 합의안을 마련했다. 트럼프가 요구한 예산의 4분의 1선인 13억 7,500만 달러로 선방했다. 트럼프는 합의안을 거부해 섯다운을 또 부르는 부담스러웠는지 서명을 하면서도 국방 예산을 돌려 장벽을 건설하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섯포했다. 이는 충분한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의회를 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한국도 예산법률주의 도입 필요

섯다운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긴 했어도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국경 콘크리트 장벽의 예산은 최소한으로 막았다.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확정권으로 행정부 독주를 견제한 것이다.

한국에선 섯다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 제3항).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의 취지를 살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에 당장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예산법률주의의 기초가 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라도 서둘러야 한다. 🌐

Culture

2월
국회 문화 행사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

못다 핀 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미술수업

기 간 2019. 2. 11.(월) ~ 2. 28.(목)

장 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작 가 이경신

전시품 <못다 핀 꽃> 등 연필화 30여 점

문 의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마감일 및 학술지 발간일

공 모 마감일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9월 30일

학술지 발간일 상반기 5월 31일, 하반기 11월 3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공모 마감일 이후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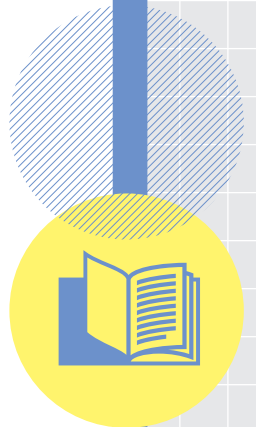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E-mail 제출(journal@nabo.go.kr)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편집위원회

전 화 02-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Vol.53

예산춘추